

<기사 처음으로>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고 △ 11월에 진행된 행사를 '다가오는 11월'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제작자는 앞의 두 가지 항목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용이 편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결국 방송되지 못했다.

KBS 심의실은 앞서 라는 작품도 "KAL 858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조작설을 주장한다"며 제작자에게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열린채널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가 KBS에 강력히 항의해 편성실과 심의실 그리고 협의회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거쳐 다시 방송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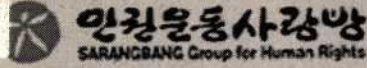
'열린채널'에서 방송되는 작품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작품을 KBS 심의실에서 재심의하는 구조가 현재의 문제를 빚어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영상미디어센터 이주영 실장은 "아직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액세스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는 액세스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장치'속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협의회가 KBS시청자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어 있고 KBS의 전파를 타고 송출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BS 심의실을 거쳐야 하는 '이중심의' 구조가 있는 한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열린채널'은 국민들이 방송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객체에서 제작으로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2002년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송 불가 사건처럼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완성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4일 (화)
제 27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2. <기자의 눈> '편견으로 차별 없앨 순 없어요'
3.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4. 주간인권흐름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끝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가 이라크를 보려"했다.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 제국주의 미디어의 얘기가 아닌 이라크인의 목소리 그대로를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참여자들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실제로 이라크인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됐다.

이라크침략전쟁이 왜 인권침해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판부로 참여한 내게도 마찬가지의 시간이었다. 위는 시간에 문정현 신부께서 진지하게 "유죄요 무죄요"를 필자에게 물을 정도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열을 뿜었다. 배심원단의 고개가 가우뿍한 것 같지 않냐는 기소인단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을 위한 변호인단은 "불능에 가까운 재판을 왜 하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전범민중재판에 던졌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테러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의 발동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해서는 "이라크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당장 내 아이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가만있을 수 있느냐"며 "한반도전쟁 위협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인단을 대리한 김철준 변호사는 "한반도 전쟁이 누구에 의해 비롯되나?"고 반문했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아닌 조지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만행이 두렵다"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며 "전쟁늬움을 막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평화애호, 부당한 침략에 대한 거부,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무기"라고 역설했다. 침략전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방대한 자료가 막연한 반대를 '확신'으로 승화시켰다면, 이라크인, 베트남 참전군인, 현지에서 활동한 의료인 등의 증언은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줬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헌법, 국내법률의 위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미영의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라는 것과 이런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병력을 파견한 피고인 노무현의 행위가 침략범죄의 공범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생존터전의 유린과 자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할 것 △인간다운 생존 보장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재화를 침략전쟁에 소비하는 일을 중단할 것 등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국가에 대한 9개항의 권고를 했다.

"침략전쟁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불의한 침략전쟁에 불복종할 권리는 세계인민의 권리"라는 선포는 철군이 이뤄지고 평화와 울 때까지 민중법정이 평화애호민중의 생활 그 자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편견으로 차별 없앨 순 없어요"

인권위 '인권 포스터'에 차별 가득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라는 문구가 씌어진 하얀 종이 위에는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16점의 포스터 중 하나로 최근 인권단체와 학교로 배포된 작품이다.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문화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며 "차별 예방과 인권향상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모, 성소수자, 학력, 성차별, 나이 등 우리 사회의 차별문제를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별 예방을 목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던 인권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포스터에 들어간 말과 그림에는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림 뭐합니까 솏다리라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는 '솏다리'가 잘 생긴 외모를 가리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 '솏다리'라는 외모 차별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전 대머리지만 눈썹은 많아요" 역시 대머리라는 '단점'이 있지만 술 많은 눈썹으로 머리카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제가 그렇게 촌스럽게 생겼나요?"라고 묻는 여성의 얼굴에는 주근깨를 가득 그려놓았다. 주근깨 박힌 얼굴은 촌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촌스럽다고 놀리지는 말자'라는 것. '차별'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려던 것이 오히려 사회에서 통용되는 '외모차별'을 인정해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포스터의 인권침해는 비혼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을 표독스럽게 그려놓는다가, 남성 동성애자를 머리를 기르고, 입술 화장을 한 모습으로 그려 놓아 이들이 대중문화 속에서 '전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다던 인권위가 스스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는 인권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금색의 머리를 한 여성을 그려놓고 "금발로 염색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금발을 좋아하거든요"라거나 "핑크족이 한국말로 양아치라구요?"라는 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작된 포스터는 앞으로 학교 수업용이나 지하철 등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일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배포된 포스터에 대한 회수와 아직 배포되지 않은 15점에 대해서는 '인권의 시선'으로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이른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높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비공개 약속 위반 등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방식은 차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뒷짐 지고 있던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피해자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 성폭력 사건에서 예외 없이 고개를 내밀곤 하던 피해자 유발론 혹은 피해자 행실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높아진 인권의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여론이 '가해자' 엄벌만을 촉구하고 있는 사이, 경찰의 또 다른 강압수사와 언론의 마구잡이식 보도, 네티즌의 행보 뒤에 따리를 튼 폭력성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세를 불리고 있다. 경찰은 애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생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가해자'들이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에게 피의 학생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한 예까지 있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성씨와 나이는 물론 주소지를 구 단위까지 공개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에 빠뜨렸고, 피의 학생 하나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터뷰 기사를 실어 피의자의 사진이 인터넷을 떠다니도록 만들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로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사진과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사진, 핸드폰 번호, 합격 예정 대학과 직장까지 추적해 여기 저기 퍼나르며

응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원정 응징론'까지 가세해 폭력으로 피의자들을 응징하는 선동이 꼬리를 문다.

'철저 수사=구속 수사'라는 공식에 기반을 둔 엄벌 촉구론도 문제다. 성폭력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구속', '구속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면 더욱 그렇다. 범죄의 성격이 잔혹하고 그리하여 신속한 해결과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수록 수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피의자 인권은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세상과 고립된 구속 상태에서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살인 자백을 해야 했던 10대 소년수의 억울한 옥살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구속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정적 접근이나 사적인 보복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절차의 확립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나아가 성폭력 사건 예방과 가해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라는 기본을 닦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배경내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12.8)/한나라당,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 자행(12.9)/국민연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개최(12.11)/국보법 폐지를 위한 집단체상 단식투쟁 500여 명으로 확대(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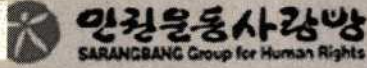
2. 부시·블레이어·노무현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다

'부시·블레이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연세대 백양관에서 진행(12.7~9)/일본 정부, 자위대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결정/국회 국방위,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시도...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 연장은 범죄의 연장"이라며 집회(12.9)/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유령을 부르며>, <바그다드 이야기> 상영(12.10)/전범민중재판 최종선고 및 문화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진행...부시·블레이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유죄' 선고(12.11)/미·일 2002에 공동작전계획 '5055' 수립한 것으로 밝혀져...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12.12)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5일 (수)
제 27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2. '간첩공정당', 한나라당은 가라!
3. 민영화 뒤의 'X-파일'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이 3대의 차를 타고 와서 영장도 없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웠다"며 양 씨는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어딘지도 모르는 건물 지하실 방으로 끌려 내려갔고, 그때부터 견디기 힘든 고문의 연속이었다. "옷을 벗으라고 해서 거부하자 7, 8명이 달려들어 때리며 강제로 옷을 전부 벗겼다"며 그때 느꼈던 공포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자백할 것을 강요했고 양 씨가 "누군데 이러느냐"고 묻자, 바로 주먹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양 씨에게 "너는 남한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간첩으로 중부지역당 강원도당 책임비서임을 자백하라"며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들이대며 협박을 했다. 결국 비너뽑기, 긴자투를 무릎에 끼워 넣고 밟기, 창틀에 묶어 놓고 치기 등 3교대로 행해진 술한 고문에도 양 씨가 진술하기를 거부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당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이었던 정형근 의원이 조사를 한 것. 양 씨는 "어느날 잠잠게 생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막대기를 가지고 성기를 10대 정도 쳤다. 그때 느낀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여기서 못 살아나가겠구나'라는 절박한 심정이 그 사람(정 의원)의 얼굴을 기억하게 했다"며 정 의원이 성기고문을 했음을 확실히 밝혔다. 결국 계속되는 고문과 회유에 자질대로 지친 양 씨는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민족해방에국전선', '조국통일에국전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을 위는 '남한 최대 간첩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양 씨가 고문당할 때부터 그 인물이 정 의원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귀뚜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우리 사장이야'라고 했다"고 전했다.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사면된 뒤,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 의원을 TV에서 보고 그인 줄 알아보게 됐다. 양 씨는 "정 의원이 내가 하부조직원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12년형을 받을만큼 핵심인물이었던 나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도 "청회색 바지를 입고, 상의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특유의 비웃는 듯한 표정과 경상도 말투를 쓰고 키는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173cm 정도였다"고 묘사할 정도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 양 씨는 "조사과정에서 (정 의원) 성기고문 장본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대를 위해,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소고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만약 고발한다면 결국 당신은 당신의 탓에 걸릴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국보법의 공포 재현 막아야

양 씨는 이철우 의원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대협 활동으로 87년부터 알고 지냈다"며 "92년도에는 조애전의 조직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하며, "조애전은 민해전과는 분명히 다른 조직으로 이 의원은 민해전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실제

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색깔 공세에 대해서도 양 씨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 기자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공포는 여전히 실재다"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 의원 사건을 악용해 국가보안법을 운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냉전수구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때마다 공안과 색깔론을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려 했고, 이번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씨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혼자 다니지 말아라',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다. 중학생 아들은 기사를 보고 '정형근을(한참 말을 잊지 못하며)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 아이에게도 살기를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며 이번 일이 가족에게도 힘든 과정임을 토로했다.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 첫 관문이 되어야 함을 양 씨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사상전향'이라는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불러내려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락을 빌미로 펴고 있는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에 대해 맹비난하며 한나라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조차 붉은 색깔로 덧칠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국보법이 죽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괴물임을 생생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커녕 과거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이 안에 빨갱이 있다"는 말로 규탄 발언의 운을 뚫다. 50년 전에 미국 메카시 의원의 국회 발언을 인용한 그는 "메카시의 이 한마디가 이후 '빨갱이 사냥의 광풍'을 몰고 와 숱한 희생자를 낳았는데 한나라당의 작태는 그의 악령을 불러내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 수사차장보를 지내던 때 남산 안기부로 끌려간 그는 "지하 수사실에서 17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어 '잠안재우기'와 '성고문'을 당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그 당사자가 지금 의원이 되어 한나라당사 안에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나라당은 '간첩공장당'이라고 지적하며 "그 수괴인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정형근, 주성용, 박승환 의원 등을 깨끗이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보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마저도 공안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과거 행각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결문을 틀주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깝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들의 범죄적 행각은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국보법 폐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국민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단식농성은 13일 현재 5백60여 명으로 늘어나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를 연내에 이루기 위해 이번 주부터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 국회 앞 촛불집회를 14일 저녁부터 광화문으로 옮겼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에 대한 규탄은 15일 언론계, 16일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정세발표와 교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인대회 등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18일에는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케이티(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아래 『인권백서』)가 바로 그것.

『인권백서』에는 'KT 상품판매전담팀(아래 상판팀) 노동인권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판팀에 대한 차별 관련 자료와 산재 인정 관련 자료 등으로 채워져 있다. 'KT 상판인 전국 모임 공동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이윤의

도구로 바라보는 민영 KT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인간선언의 기록을 백서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9월 5천5백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12월에는 명예퇴직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대상으로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지위와는 무관하게 상판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의 미행과 감시, 차별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상판팀 노동자들은 '전국 상판인 모임'을 결성했고, 미행·감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고, 7월과 10월에는 KT 상판팀의 박은하 씨와 안영미 씨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았다.<인권하루소식 10월 14일자 참조>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KT 전북본부의 미행사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진실을 밝혀야 할 조사관이 "차라리 합의가 낫다"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결국 인권위 조사관은 교체됐다.

11월에는 상판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데 이용하는 다면성인성검사(MMPI)가 실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사를 받은 상판팀 노동자 중 45%에 해당되는 84명에게서 우울, 불안, 긴장, 공포, 신경과민 등을 나타내는 척도들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 검사를 실시한 신경정신과 폐기영 전문의는 "시급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원상회복 처방을 내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씨는 "상판팀 노동자들의 정신병적 증세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고도의 현장 통제·감시가 그 원인"이라고 밝히며 "KT에 의해 저질러진 감시와 차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억압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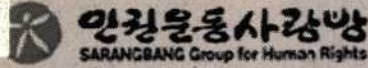
IMF 경제위기 직후 정부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급격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안되는 기간 동안 KT는 정부지분 0%, 해외투자지분 49%의 완전민영기업으로 변모했다. 게다가 KT는 저투자-고출매당 경영전략을 취한 결과 해외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기업이 되었고, 공공성은 외면한 채 '마케팅 지상주의'만 추구해 올해 5월에는 4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 상판팀 해체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 △KT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 검진 실시 △KT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등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빈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6일 (목)
제 27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2.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3.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4.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5.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체농성단에 함께해주세요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서울지노위)는 7일 제일은행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금융권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제동이 걸렸다.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던 87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면서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일은행은 3년에서 9년까지 근속한 계약직 창구직원들을 차례차례 해고해왔다. 은행측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불명확한 근거로 '인적 평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오래된 계약직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신규채용된 또다른 '계약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일은행노조 비정규직회 서운희 지회장을 비롯한 5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닷봉수 치며 인간의 평등한 권리마저 앗아버렸다"고 호소하며 지난 8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피신청인(제일은행)이 신청인들과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부당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채용 전 면접과정에서 장기근로의 가능성을 고지한 점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자동갱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계약직들이 최대 16회(8년)까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지노위의 이러한 결정은 계약직 창구직원들이 실제로는 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 지회장은 "은행이 이제까지 계약직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부당해고해 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행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돼 계약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지노위의 결정을 반겼다.

이에 앞선 8월 24일 서울지노위는 우리은행이 계약직 직원에게 제출한 계약만료 통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2003년 소속 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4만여 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은행들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부당해고한 올 한 해 우리은행은 8,507억 원, 제일은행은 8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사상최고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노위의 '원칙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로 사건을 넘겨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만 있다. 은행이 '부당해고'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방송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권의 현실을 점검

하고 이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제기된 문제는 장애인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아래 민언련)이 2003년 방송3사의 주요뉴스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0.4%에 불과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박웅진 연구원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날 이벤트성으로 쏟아지는 것 외에 평상시 정기편성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시간대에 편성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표현이 난무하는 점도 문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숙경 팀장은 "장애인을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기적이나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동정' 대 '인간승리'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열등하거나 특별한 대상으로만 보이게 한다는 것.

또한 방송관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장애인 출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5월 MBC 뉴스데스크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이 홈트복지센터를 방문해 중증성인장애인을 발가벗긴 채 목욕시키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에 장애인 관련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청조치는커녕 두 달 후 '신강균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도입'을 서울시의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해 또다시 장애인에 대한 물이해를 보여줬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수화방송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자막방송은 수신기를 달아야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장애인들에게 방송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처럼 인권침해뿐 아니라 방송에 접근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인데도 해결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징계수준이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공개 사과조차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연구원은 "선언에 그치고 있는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배당액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팀장은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제작진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며 "장애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부추긴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사과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15일 '연내 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폐지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폐지의 열기'를 좀더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민주운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 노상 농성이 민주대항쟁의 물결로 승화되고 있다"고 밝혀 대중들의 호응에 크게 고무되어 있기도 하다.

먼저 국민연대는 16일 '고문·용공피해자 증인대회'를 개최해 전창일 씨(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신귀영 씨(80년 재일동포 관련 사건), 석권호 씨(80년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가족), 이원혜 씨(90년 노동해방문학 사건), 김삼석 씨(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등의 입을 통해 정형근 의원 등 인권침해자들의 전력을 들추어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연말까지 대국민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18일 국민촛불대회를 비롯해 24일 '국가보안법 없는 2005년 새해맞이' 촛불대행진, 29일 '국가보안법 연내 끝장을 위한 범국민 촛불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말을 기해 각계각층 원로, 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홍보물'로 100만 명 만나기 운동'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드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감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7조 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는 삭제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선전선동'으로 대체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조 수정은 '정부참칭'보다 오히려 폭넓고 막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7조 수정안 역시 단어만 바꾸었을 뿐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며...17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시 바빠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고 겸허히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나무랐다.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법안'으로 국민을 무마시키려는 술수도 당내 의견이 쪼개져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1일 지원단식'과 '무기한 지원단식'을 함께 하실 분들은 매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으로 오시면 됩니다.(문의: 안지중 016-316-4855)

별금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원활동가들이 '양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가격: 1만원 / 문의: 원불교인권위 김치성 813-331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행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7일 (금)
제 27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3.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를 체험한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직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 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석달윤 씨도 고문의 피력으로 '간첩'이 되었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무려 47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임을 강요받았다. 고문수사관들은 '전신구타' '잠안제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간첩'으로 둔갑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무려 18년 동안 실형을 살았다. 석 씨를 대신해 증언한 아들 권호 씨는 복받쳐 오는 울분을 억누르면서 아버지가 당한 고문의 충격을 전했고 객석은 목젓으로 뜨겁게 올라오는 강한 분노와 함께 비탄의 눈물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검찰로 옮겨지면 공소사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밝히려 검사에게 '정'의를 신원한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협박의 연속일 뿐이다. 1980년 2월 25일 불법 연행되어 무려 78일 동안 갇혀 앓은 고문을 당한 신귀영 씨는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담당 검사에게 "다시 끌고 가서 고문한다"고 협박당했다. 석 씨 역시 검사에게 고문사실을 알렸지만 공안 검사 변진우는 중앙정보부의 의견서를 바닥에 던지며 "이 사람 다시 정보부로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것. 이미 고문의 지옥을 경험한 이들은 이쯤되면 공포에 질려 모든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용공조직 사건은 사법부의 영터리 재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전창일 씨는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수십 년 전의 분노를 다시 토해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 반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이유 없이 기각했다고 진실을 밝혀낸 바 있다. 고문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은 판결 17시간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법사에 '암흑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고문 피해는 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93년 남매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지금도 '160번 수사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수사 받던 김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160번 수사관'이 다가와 컵술로 성기 크기를 재어 보는 등 성적 모욕을 준 것. 김 씨는 11년 전이지만 당시의 수치와 모욕이 너무 극심해서 그 수사관의 생김새, 표정, 몸짓, 말투까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고문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1990년 노동해방문학사건의 피해자 이원해 씨도 '뺨 때리기' '잠안제우기' 등과 함께 폭언, 특히 사적인 편지 등을 가져와 빈정거리고 모욕을 줄 때는 참을 수 없었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냈다.

한편 사법부가 이들에게 진실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신 씨는 이미 두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인권하루소식 2679호 참조), 석 씨 역시 1993년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87년 10월에 공소시효 만료되었다고 기각했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도망치고 있었지요. 제 명의 정부군이 나를 붙잡고는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때렸고, 아기는 배속에서 죽었습니다" 라이베리아 보미카운티 출신 여성의 증언을 통해서 전쟁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국제 엠네스티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1여 년의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당했다"며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전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1821년 건국 이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야 치열했던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 끝났다. 인구 28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14년 동안 약 3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무려 100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내전은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했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혔다.

국제 엠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라이베리아: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인 강간에 대한 면책은 없다」에는 라이베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성폭력에 대한 비참한 증언들이 소개되고 있다. 전쟁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또한 집단 강간과 임신부·아동 강간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성폭력은 전투 중에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간에 모든 정당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즉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라이베리아 재건에 있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그 한 방법으로 "라이베리아 내전 중에 일어난 성폭력의 책임자는 반드시 정의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중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폭력은 전쟁이 가지는 구조적인 속성이다. 유니세프 캐롤 벨라미 집행위원장은 "전쟁은 언제나 여성들에게 잔인한 것이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가혹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라크 여성포로들에 대한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의 끔찍한 성폭력과 이라크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은 전쟁의 반인권성과 국제법 위반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서도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기소인들이 여성에 대한 전쟁의 반인륜성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총회 선언에서 "전쟁은 여성에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적을 상징적으로 여성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며 지난 11일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로 '유죄'를 선고한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중 4명은 16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연장은 전쟁범죄의 연장', '전범 노무현 심판'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펴들고 시위를 하던 이들은 20여분만에 경찰에 의해 제지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앞으로 여성기소인들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지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에 맞춰 토론회를 여는 등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녁 8시 정도까지 일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농장 주인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돌봐야 한다. 심지어 일이 없으면 다른 농가에 파견돼 일을 해야 한다. 식사도 제때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다." 중세의 봉건 영주에게 귀속된 농노의 노예적인 삶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200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처참한 현실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가 오히려 연수생들에게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상황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산업연수'라는 취지만 있을 뿐 한국 정부는 연수제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 헐값에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지난 10년을 진단했다. 연수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연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 이 소장은 "연수기간 내내 하루 12시간씩 부려먹으며, 작업장에서 버تن 하나 누르는 것이 무슨 기술연수냐"며 "연수제는 합법을 가장해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대우를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입국심사와 이규홍 사무관은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법무부에 신고해 달라"는 신심성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월 29일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연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뿐 추천업체와 연수업체에게 특혜만을 안겨주는 연수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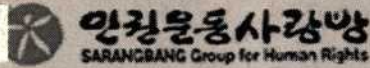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10만 명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현재 18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이 사무관은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르지만 단순노무인력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겨레 흥세화 논설위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해 이중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권의식의 부재를 꼬집었다.

한편, 연수생이었던 바사라트 알리 씨와 에르가웨브 박호디르 씨는 지난 8월 "연수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11월 "연수제는 합헌적인 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현재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부 또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지만, 노동부의 예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행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8일 (토)
제 27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2.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3.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4.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너는 누구였느냐. 그리고 지금의 너는 누구냐"

'전향몰이'라는 어두운 시대의 악령이 또 다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을 되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한나라당이 첫 번째 독침을 내뿜는다. 열린우리당이 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여론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제 두 번째 독침을 날린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니 전향 여부를 확실하게 하라. 아니나 다를까. 수구연론도 갖가지 요철을 늘어놓으며 전향 고백을 강요한다. 한중련 수배 해제 문제, 송두율 사건에서도 보아왔던 익숙한 풍경들의 재생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오해한 어른이 무심게 잘못의 시인을 요구할 때, 아이도 끝까지 침묵함으로써 진실과 양심을 지킨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시대, 색깔몰이와 전향강요 공세는 침묵을 지키는 최소한의 일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과거'에 편향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다'는 이 의원의 고백은 그것이 진실의 표현이든 그렇지 않든, 한 인간을 폭력과 공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낳은 잔혹상이다.

그들은 말한다. '뻗뻗하면 왜 내심을 못 밝히나. 우리와 같이 살려면 네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전향을 했다면 품을 것이요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단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권력의 폭압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내심은 밀봉된다. 권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사상을 꺾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평의의 래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결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 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하며 저질러온 폭거의 정확한 결과다.

다행히 이번 색깔 파문은 해묵은 색깔론에 대한 염증과 고문·용공조작 주장으로 역풍을 맞으며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파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 하나를 폐기하는 일로 그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과 사상·표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기 위해 인제는 귀환할 '전향몰이'라는 악령에 영원한 안녕을 고해야 하는, 더 지독한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상생(相生) :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 정말 '함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사불이(勞使不二) : 노동자와 회사는 하나다. 만약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회사에 대항한다면, 탄압을 해서라도 '하나'로 만든다.

무분규상태 :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상태, 혹은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고용노조가 들어선 상태.

'다음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는 시험지에 위와 같이 답을 했을 때, 노동부가 채점

을 했다면 점수는 100점이다.

16일 노동부는 '노사갈등을 넘어서 신뢰와 협력으로'라는 구호를 전면내 내걸고 '2004년 신노사문화대상' 최우수상 기업으로 '노동자 인권침해 왕국'인 KT(케이티)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KT가 '노사불이'의 정신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모색해 노사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한 결과, 2001년 이후 '무분규상태'를 유지해 노사화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KT의 사례는 '신노사문화'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2003년 KT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5천5백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명예퇴직시켰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노동자는 96%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협박을 당한 노동자도 90%를 넘었다. 98%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85%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소가 상품판매업 노동자들에게 실시한 다면성인성검사에서는 45%의 노동자가 "시급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본지 2004년 12월 15일자 참조> 민영화 이후 KT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권침해 보고서인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를 발행한 바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가 신노사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KT는 "회사의 업무 방침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고 극구 주장해왔다. 노동부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권침해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상 수상기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단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과 10월 두 명의 KT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의 감시활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산재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굳이 모르는 체 하며 "KT는 90년대부터 민주노총이 선도하던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이었으나...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킨 대표적 모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KT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노동부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모범케이스'라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성명서에서 발표한 것처럼 "노동부가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동부는 KT의 신노사문화대상 수상 결정을 즉각 철회할 뿐만 아니라 허구적인 신노사문화대상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처음으로>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 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한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하려는 것은 국회 앞 단식농성단을 짓밟고 가는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을 역사 앞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시대의 상징인 색깔공세로 국민을 농락한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타당에게 떠넘기면서 개혁입법을 제지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러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마땅히 없어야 할 국보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17일 여의도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하고 시급한 폐지'를 주장했다.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여성문화예술기획, 우리만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로 구성된 이들은 '예술가들의 창작을 억압하는 국보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단식에 들어갔다. 폐지의 틀들은 온라인으로도 퍼지고 있다.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www.sugugara.or.kr)은 20여 개의 네티즌 그룹과 함께 국회앞 단식농성의 속보를 알리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온라인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들 네티즌들은 18일 (토) 개최되는 '색깔공세 저지와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국민촛불대행진' 행사를 현장과 인터넷을 연결해 '네티즌과 함께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촛불대행진'으로 벌어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동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7일 열린우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열린우리당은 기어코 이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국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파병연장이 아니라 철군과 종전"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은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은 생명수당을 통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연장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아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범민중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씨가 참가해 이라크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이셈 씨는 "한국정부의 연장동의안은 더욱 많은 이라크인들을 죽게 할 것이고, 그것은 이라크에 대한 재앙이자 파괴"라며 "이라크인들은 총을 든 군인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철군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인들 스스로 평화롭게 살고 스스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연장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독으로라도 통과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150명 전원이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결국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다음 주 중에 연장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16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파병연장은 전쟁범죄의 연장"이라며 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 4명은 17일 오후 4시 경 불구속으로 모두 풀려났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21일 (화)
제 27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2.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3.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4.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탕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2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아래 전여농) 소속 농민 11명이 미국계 사료생산유통 회사인 카길 사무실을 점거하고,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소속 농민 1천5백여 명이 독립문과 한강 다리 및 도심 곳곳에서 차량 1천5백여 대를 동원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중국·태국·호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시판율 30%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의무수입물량을 2만여 톤씩 늘려 2014년에는 올해 20만5천 톤의 두 배인 41만 톤을 수입하게 된다. 의무수입물량의 확대를 통해 사실상 쌀 시장 개방을 점자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타결의 결과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쌀 관세화가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동안 수입된 쌀은 가공용 쌀에 국한됐기 때문에 국내 농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밥쌀용까지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민들은 벌써부터 "쌀협상이 통과되면 국내 농민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고 말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미디어 참세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를 인용, 이번 협상에 따라 국내 쌀 총소득은 올해 6조7,870억 원에서 2014년에는 4조1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률도 극도로 낮아져 국제 사회에서 식량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농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현재에도 국내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쌀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자급률은 5%로 떨어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한 시간에 4천여 명이 굶어죽고 있고 식량위기 사태로 작년 한 해에만 쌀값이 2배로 폭등했다. 게다가 중자산업의 경우에는 '카길'사를 비롯한 주요 5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곡물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10대 기업이 세계 농약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여농은 17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왔고, 전농도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과 1인시위를 지속하다 20일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4백만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심정으로 정부에 마지막 호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2005년을 열흘 앞둔 20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길이 영하의 날씨까지 녹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투쟁의 불씨를 지켰다. 3백여 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이 1주일만에 5백60명을 넘어섰고, 단식농성 15일을 맞이하는 20일에는 1천349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국회의 계속되는 파행과 한나라당의 타협을 내세우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때문에 국보법 폐지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영하의 추위에도 사상 초유의 대규모 단식농성단을 거

리로 나서게 한 것. 이들은 기자회견 내내 "열우당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장은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

단식농성단은 22일 마로니에에서 종로를 거쳐 청와대 근처까지 촛불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24일에는 '국보법 없는 2005년을 맞아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명동, 서울역 등 동서남북에서 촛불을 집화해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국보법 폐지를 설득해 나갈 행사도 이어진다. 또한 국보법 연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9~30일에는 전국각지에서 여의도 농성장으로 집결해 1박 2일 철야농성을 벌이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안에서도 국보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농성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야합저지와 개혁관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들도 "4대 개혁입법안 통과를 위해 31일까지 240시간동안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사실상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국제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재미동포 정유미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메일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요청하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8일 일본, 프랑스, 이집트 등에서 222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작가인 존 페퍼,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 등 학생, 법률가, 교수, 의사,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며 국내를 넘어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인권운동사랑방은 20일 유엔의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티트 문타본 씨에게(이하 특별보고관) 북인권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28일 제5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대한 의견 개진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특별보고관은 이 연설을 통해 북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들(국제조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과 '구체적 난제들(식량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등)' 그리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우선 북과 유엔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은 특별보고관도 지적했듯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왔다. 북이 거부하는 것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공세인 대북결의안 뿐"이라고 밝히며 "유엔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행위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빌미로 한 체제 위협은 인권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권과 생명권은 북인권 문제의 핵심 화두이다. 의견서는 식량난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며 '원조 분배 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망 받고 있는 국제원조단체들에 따르면 "북만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이라고 규명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이주노동자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기뢰탈북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유형들을 밝히며 유엔이 그 심각성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와 '공개처형'과 같은 사형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북만의 특수한 문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북에게도 이러한 인권적 실천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 질서가 끝나야 하며 이를 위해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보고서는 '한반도 인권회의' 명의로 기획되었으나 단체들 간의 이견을 존중해 각 단체별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는 체내바와 방북의 유엔 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진통제만 놔주며 계속 일을 시켰습니

다. 정기적인 보건소 진료가 있던 했지만 염증이 생겨도 약만 주고 기록은 '정상'이라고 남겼습니다." 2001년부터 2년 가량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다 자궁경부암 말기를 앓게 된 30대의 유모 씨는 심각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성매매를 계속해야만 했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다시함계센터는 20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불금 등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도 이로 인해 생긴 질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질환에 대한 책임을 그 업주들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경 소장은 이번 소송을 위해 성매매 여성 1백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문 바탕으로 성매매와 부인과 질병의 상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60% 이상이 한달 평균 2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80% 이상이 업소에서 일할 당시 질염, 임질, 골반염을 비롯한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의 심각한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성매매를 지속하기 위해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약 50%가 소위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불법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자 차모 씨는 "인근 병원에서 '골반염이 심하다'는 결과를 진단을 받았지만 '은지 얼마되지 않은 게 비실거리며 병원을 다니고 난리냐'며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한모 씨의 경우는 자궁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상태였음에도 (업주가 정해준) 병원에서 이상은 있지만 "조금씩은 일할 수 있다"고 말해 계속 일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업주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의 결과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 데 있다. 법률지원단장 이명숙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양자의 연관성을 실질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난제이며,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도 성매매 여성의 과실과 업주의 책임 비율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승언 의료지원단장은 업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 나아가 정부의 인식 부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례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의료보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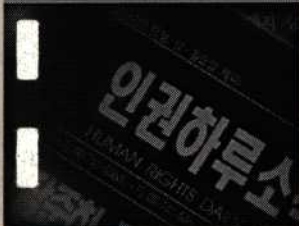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행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22일 (수)
제 27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이 주의 하루소식
이 주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2. 줄거운 물구나무
 3.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4.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동사무소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안된답니다. 고물 팔아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버는데 방값(쪽방)도 안됩니다. 점심은 고물상에서 때우지만, 하루에 라면 하나 (사서) 끓여먹기도 힘들습니다" 21일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서 만난 김근호 씨는 자신의 막대한 생계를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17세에 가출해서 지금까지 거리나 쪽방을 자신의 삶의 동지로 삼아온 김 씨는 노숙인의 전형적인 처지를 보여주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실사)는 노숙인들 대부분이 13~14세에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내던져져 거리나 쪽방에서 생계를 유지하다 48세 정도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고 추모제 서두에서 밝혔다. 그들은 올해 하루 1명 꼴로 거리에서 사라졌다.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을 기억하는 추모제는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동지 받처럼 칠흙같기만 하다. "굶어 죽은 아이 5일 동안 보관하고 있던 한 아저씨, 전기세가 없어서 촛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할머니, 이것이 생존권 보장을 약속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나!"라고 추모사를 시작한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빈곤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노숙자가 작년의 2배를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IMF 때처럼 '공공근로 확대', '한시적 생계보호' 등 뭐라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정부는 동장군과 싸우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의 닦아주기엔커녕 부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고작"이라고 소리쳤다. 노숙인들은 류 소장의 추모사 중간마다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기도 했다.

지난 7월 가출한 문모 씨가 철도 공안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그의 죽음을 계기로 (노숙인)당사자모임이 만들어졌다.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등 폐지취급을 받고 살았다고 증언하는 당사자모임의 한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복원, 일자리 알선, 직업 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의 소매를 끌며 하소연 한 김 씨 역시 "가장 절절한 건 일자리"라며 공공근로를 알선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추모제는 일년 중 가장 긴 겨울밤인 동지날 서울역 광장에서 1백50여 명의 노숙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뼈 속 깊이 스며드는 찬바람을 맞으며 진행되었다. 쪽방 체험, 주민등록말소자 신분복원 상담과 복원비 지원 등 사전행사도 함께 열렸다.

<기사 처음으로>

줄거운 물구나무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

아이들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고, 지나가던 교사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어떤 아이들은 싸우다가 다쳐 보건실로 가고, 어떤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욕만 먹는다. 5년째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일들이다. 어느새 학생도 교사도 무뎌지고 지치기 시작한다.

언론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인성교육의 부재를 한탄하며 아이들을, 사회를 탓한다.

'바른 인성'과 '바른 행동'을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상을 준다. 교사들은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알아들었니?'라며 태곳적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바른 인성과 바른 행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안다.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공유 없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해야해"라고 말로만 떠들기엔, 학교 울타리 안팎에서 아이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소풍 가던 길에 줄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맞고, 학원 가던 길엔 선배들의 괜한 시비에 시달리기도 한다. 학교는 공사 중이라 방과후에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한다. TV에서는 전쟁이 게임처럼 보도되고 자연은 편리를 위해 희생되며, 교과서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표현의 자유와 통일의 가치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이다. 이렇듯 학교 안팎의 우리네 삶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소중히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들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춤을 춘다. 교사들은 이론과 현실의 일치를 지향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간극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포기한다. 교육 내용과 삶에서의 실천 간 괴리를 용인하며 "아직 어려 모를 거야!"라는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로, 아이들을, 사회를 탓하며 비현실적인 '교육'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야기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인성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공허하게 외치고 싶지도 않다.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권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아이들과 함께 인권의 감수성으로 느끼고 싶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연대의 기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나를 포함한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의 한 소절이다. 아이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 '더불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 '희망을 노래해야 함!'이다.

<기사 처음으로>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찬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들던 20일 저녁 살람 씨와 하이셈 씨를 거리에서 만났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마치 이라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살람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부시-블레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증언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입국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구, 전주, 광주 등 5개 지역을 돌며 진행된 '이라크 전쟁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했고 7일부터 시작된 전범민중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라크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국내 평화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14일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평화배움터' 설립 간담회에 참가했다. 평화배움터는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살람 씨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인권단체인 '국경없는 아이들'과 국내 평화단체인 '평화바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라크 아이들은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팔투자와 사드르 지역 중 한 곳에 평화배움터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평화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15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만나 '이라크'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라크에서 온 손님들에게 "부시와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퍼붓기도 하고 '평화를 원해요'라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살람 씨가 전하는 이라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한 아이는 그에게 '축복'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담임선생님은 "기대 이상의 평화수업"이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21일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이라크로 돌아갔다. 이들은 총성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셈 씨는 의료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살람 씨는 교육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은 해외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른다"며 "한국의 반전운동을 이라크인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참가한 '파병연장 반대' 촛불집회에서 살람 씨는 "비록 지금 우리는 작은 촛불을 들고 있지만 이 불은 머지 않아 커다란 태양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메시지를 전했다. 커다란 태양이 비추는 날, 이라크에서도 한국에서도 앳살람 알라이쿰(그대에게 평화를!)

<기사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의 과업 이후 강릉시가 노조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내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30일 강릉시가 발표한 '시청 내 각종 집회장(시위) 및 홍보물 게시 지정운영 내규'에는 "청사 내·외의 무질서하고 난립된 집회 및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규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강릉시민 전체에게 적용 시키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규에는 시민들의 기본권보다 강릉시의 행정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빼놓아진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홍보물 게시에 있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강릉시가 불은 하다고 판단하거나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홍보물은 게시할 수조차 없다. 또한 집회를 할 경우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해야 하며, 집회 장소는 청사우편 '헬기장'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강릉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행정작업을 벗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외에는 어떠한 집회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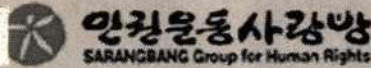
이에 강릉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강릉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적인 내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에는 "내규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5가지 사례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집회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 5차 강릉시분회는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사업주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질서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동권두섭 법률차장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업고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전 검열을 통해 게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집회 시위 장소 또한 시에서 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록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23일 (목)

제 27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9월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 국보법 폐지를 위한 씬 없는 외침
3. 경찰청 거짓말에 안 속아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한 달 동안을 공식으로 흘러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인섭(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함께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신임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권 변호사로 2001년 인권위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동원시키고 인권위를 양상한 인권심판기구로 전락시킨 1기 인권위의 역사적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기 인권위원 인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창국 위원장이 연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2기 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며, 특히 비상임위원 시절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정강자 위원이 검증과정도 없이 상임위원으로 인선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인선은 여전히 변호사와 법학자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해 1기가 저지른 '인권심판기구'라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이미 "인권위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감수성이며 이는 학문적 지식을 넘어 인권분야의 장기적인 활동경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법조인과 비법조인, 남성과 여성 등 사회 각계 인사를 두루 포함시켜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인권 현장 활동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추천한 최금숙, 나천수 비상임위원들 역시 어떤 인물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아 '인권위원'의 자격여부는 앞으로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명과 임명과정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에 우려하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필수"라고 재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누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어느날 갑자기 임명이 발표되는 밀실 인선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범용 활동가는 이러한 밀실인선이 관행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천된 인권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압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2기 운영의 투명한 운영 절차에 회의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씬 없는 외침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차회담을 열어 4대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수구세력과의 명백한 야합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필코 연내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열망을 모아, 자신들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단식 농성단도 합의가 아닌 야합으로 정치권이 국보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윤용용 씨는 "어제 소식을 듣고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다"며, 하지만 "결의가 꺾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안에 꼭 폐지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용규 씨는 "국민들이 개혁을 염원하며 만들어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주에서 올라와 배고픔보다는 서울의 추위가 더 힘들다는 학생 백운용 씨는 "우리 민중들이 스스로 악법을 철폐시키기 이전에 결코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국보법이 연내에 폐지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오후 2시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규탄집회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모인 학생, 시민 5백여 명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라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는 당사를 향해 계란 수십 여개를 던지며 한나라당과의 밀실야합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설혜영 씨는 잠시나마 열린우리당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실망이라고 하면서 "같이 투쟁하는 사람을 믿고 좀 더 결의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부터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침묵 촛불행진이 있었다. 오늘로 단식농성 51일째를 맞은 송현식 씨를 선두로 해서 길게 대열을 이룬 단식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광화문까지 행진을 마친 이들은 저녁 7시부터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자회담 원천무효,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촛불대회'를 진행했다. 행진도중 송현식 씨와 박영미 씨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정치권이 거대한 국회 안에서 그들만의 평화를 위해 정치적 야합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1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을 단행하며 매서운 겨울 추위에 맞서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경찰청 거짓말에 안 속아

고용직공무원노조, 단식농성에 이어 삭발

"머리카락이 아가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설움의 세월을 끊어내고, 당당한 노동자로서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연대를 보내준 동지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12년 동안 '경찰청고용직공무원'으로 일해 온 김미숙 씨. 뺏속까지 시리게 출던 22일, 파르라니 짙은 머리위로 '생존권 사수'라고 써 있는 머리띠를 묶으며 김 씨가 한 말이다. 삭발까지 하며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일선 경찰서에서 사무보조, 경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고용직공무원 노동자의 역할이지만 김 씨는 "경찰들이 먹는 밥과 빨래까지 해야 했으며, 개인 심부름도 해줘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김 씨에게만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다. 한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는 "출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가서 청소는 물론 경찰들의 구두까지 닦아야 했다. 심지어 자취하는 경찰의 집 청소 및 연탄불을 아침저녁으로 갈아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받는 임금도 턱없이 낮다. 10년을 넘게 일해도 기본급이 60만원을 넘지 못해 12년을 근무한 김 씨가 받는 임금은 고작 특별수당까지 합쳐 100만원을 조금 넘는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커녕 2003년 12월 직제개편을 통해 고용직공무원 노동자의 정원을 89명으로 줄여, 1169명이던 고용직공무원 노동자 중 496명을 지난해 말 1차로 '직권면직'시켜 내쫓았다. 이어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12월31일 직권면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노조를 결성해 직권면직 철회와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금까지 벌여오고 있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최혜순 위원장은 "경찰청은 '기능상실'과 '예산감소', 그리고 '직제폐지'를 내세우며 직권면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89년 이미 고용직공무원의 직제가 폐지되었으나 2002까지 신규채용을 해왔으며, 내년예산도 올해보다 3천715억원(6.8%)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난 뒤 그 자리에 1000여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실제 고용직에서 쫓겨나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된 동료들도 많이 있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경찰청의 면직조치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남성이 주를 이루는 국가직고용직공무원들의 경우 89년 5월 경과조치에 의해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자는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지만, 99%가 여성인 경찰고용직만 기능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5개월이 넘도록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김 씨는 "경찰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동료의 집까지 찾아가 '당신 자식이 이상한 데 빠져있어 구속될 수도 있

다.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는 등 가족에게까지 온갖 협박을 하며 자진사퇴를 강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경찰청의 직권면직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최기문 경찰청장 관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이후로는 모든 집회를 비롯한 단체행동도 불허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경찰의 온갖 협박을 피해 지난 17일부터는 민주노동당 사에 모여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다. 21일에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노조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연대를 해 주는 많은 동지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면서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웃어 보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졸업 발표회를 한다며 '24일 엄마 올거지'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답도 해줄 수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김 씨가 그리고, 노조원들이 하루 빨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24일 (금)
제 27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개혁 입법 발목 잡기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I, II」
3.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랑받림
4. '4자회담' 정국을 깨라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끈결음을 견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헌 입명권 독점(위헌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청문회 개최 △공소시효 정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아래 범국민위) "이 의원이 지적한 이 조항들은 이미 그가 2001년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로 규정한 것을 지금 와서 재삼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민위가 덧붙인 반박자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의원의 주장이 '과거사법' 제정에 탄지를 걸려는 의도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공소시효 정지 위헌'이 그 대표적인 예.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역사적 사실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깎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이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동행명령권에 대한 이의제기도 문제가 있다고 범국민위는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권한이 영장주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장주의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규정이며 동행명령제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범국민위는 지적한다. 범국민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이 없다면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인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며 결국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한다고 조사 권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I, II」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정의'와 '인권'으로 이어주는 촉매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과거 청산'이 언제나 '불처벌'과 '지나간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때 최근 발행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아래 보고서) 역시 국가범죄를 기록하고 기억할 의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크게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는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의문사를 밝혀내고 있으며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과 관행, 그리고 의문사를 유형별로 분석해 놓고 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I』에서는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으며,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II』에서는 2기 의문사위원회가 조사한 개별사건들의 결정문을 실고 있다.

보고서는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 축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구조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대개 의문사가 국가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과 은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고문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경찰, 특무대, 헌병사령부 등 공안기구에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포함해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학살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낳게 했고, 군사독재 하에서 빈번히 일어난 고문·가혹행위 등 열악한 인권상황은 일상화된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일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치열한 운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최근 노동부가 제정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함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마치 이 법만 통과되면 마술처럼 차별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 차별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비교할 수 없게 만들고, 설사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이 한 가지라도 다른 업무를 한다면 차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느 사업주가 미리 알아서 차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해설서에서 담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는 그저 말잔치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설서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던 사업주들이 차별 금지로 인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것처럼 차별 금지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어 해설서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주범인 '파견' 대상업무를 26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용자에게 '기간제'와 '파견제'라는 양 날개를 달아 주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해설서의 확신은 정부의 '자기 최면'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해설서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로 모든 노동자들을 '평등한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노동3권마저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들에게 노예이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야욕은 여

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4자회담' 정국을 깨라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4인 대표회담'(아래 4자회담)이 21일에 이어 다시 열렸다. 오후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안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권침해조항은 '개정'이 아닌 '제거'라고 주장했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27일쯤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4자회담을 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이날 오전 9시30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염원하는 의원 및 사회단체대표들은 국회 본청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회담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표결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40시간연속의원총회' 소속 의원들은 하루 이틀쯤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4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대표단의 회담장 진입을 막고 "4자회담은 무효"라며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4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이에 근거한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폐지 후 형법보완'이며, 한나라당내 다수안은 '소폭 개정'이다. 따라서, 양자가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킨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대체입법안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를 포함하여 최근 상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바람과는 무관한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것도 연내에 폐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21일 "양당의 합의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폐지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추위, 허기와 싸우며 힘겹게 투쟁을 일구어온 국민단식농성단에게 지금 '4자회담 정국'은 넘어야 할 가장 힘든 산인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행일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28일 (화)
제 27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발을 갈자
- 2.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발을 갈자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이 더욱 찬란히 빛나듯이 저물어 가는 2004년의 세밑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국회 앞에서 십 수일째 폭기를 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1천 3백여 명의 농성단의 모습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0,80년대 민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목마름은 민중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선출하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민중의 뜻을 번번이 배반해 왔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자리를 빼앗아 군림한 대의민주주의의 허상에 온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고 국민을 '관객'으로 만드는 화석화된 민주주의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아래로부터 서서히 각성하기 시작했다.

1년 내내 자식처럼 키워온 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엮으며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식량권 요구는 국회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김선일 씨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절군하라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 전쟁에 추가파병동의안까지 전격 통과시켜 우리를 전범국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파병연장동의안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의사봉의 세례를 받을 판국이다.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와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표자'로 뽑아 달라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던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너로 전락하는 배신을 일삼았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본권의 문지기'가 주인을 물어뜯는 맹수로 돌변한 셈이다.

어찌할 것인가.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목을 빼고 기다릴 순 없다. 국민의 수족 노릇을 하겠다며 선거 기간 내내 사랑발품을 늘어놓던 정치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묻지마' 정치로 국민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이 인기 중 잘못을 저질러도 온갖 면책특권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 구조로는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적 '특권'만을 강화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국민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권일 뿐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치인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한 우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각지에서 돌아나고 있음을 목도했다. 2004년 부안 주민들의 승리로 끝난 해폐기장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금이야 2월 자체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를 이끌어낸 주민투표는 국가주도의 선거가 60%에 밀도는 참여율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부안주민들은 군수 소환운동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투쟁은 '해폐기장 백지화'라는 성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국 방방곡곡에 심기도 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쌀개방 찬반투표를 실시해 '직접민주주의'의 쟁기질을 시작했다.

12월에 있었던 전범민중재판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은 평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생력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번져갔다. 전국 풀뿌리 조직의 참여로 만들어진 전범민중재판은 '평화를 행동'으로만 들어가는 3천4백여 명의 기소인들로 이루어져 '부시'와 '블레이', '노무현'을 전범으로 심판하는 '민중법정'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화'를 화두로 시작된 항해는 정박을 꿈꾸지 않는다. 평화를 향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고, 그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2005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사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1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국보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고, 국민연대는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백여 명이 단식을 시작했다.(12.6)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국보법의 칼날을 열우당에게 들이밀었지만, 열우당은 '국보법 연내 폐지' 당론을 스스로 번복하며 갈팡질팡했다.(12.8)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각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12.15) 국민연대는 "야합으로는 '폐지 열망'을 막을 수 없다"며 열우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12.17) 국민연대는 단식단을 1천3백여 명으로 늘렸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2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도 '4대 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12.20)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열우당은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4인회담'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수구세력과 야합하면 국보법 폐지는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4인회담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송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12.2) 이라크에서 전범민중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서울,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해 전쟁피해에 대해 증언했다.(12.2~5) 7일 드디어 전범민중재판이 연세대 백암관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시작됐고 기소인들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 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중단할 것 등 9개항의 권고를 했다.(12.7~11)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전범민중재판 4명의 기소인들이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되기도 했다.(12.16) 실행위는 파병연장 반대와 한국군 철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시작했다.(12.20)

3. 비정규직, 구조조정...노동자들의 '무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12.14)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화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신노사문화대상 최우수 기업으로 KT를 선정해 인권단체들의 빈축을 샀다.(12.16) 제일은행이 장기근속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해 해고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해 계약직 노동자들의 자의적인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12.15)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1월 4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드림>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